

JDI 제2차 제주미래포럼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

-
-
-
-
-
-

- 일시 : 2008년 8월 19일(화) 15 : 00 - 17 : 30
- 장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최 : 제주발전연구원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1부 개 회 식 15:00~15:20

- 개회사 : 허 향 진 제주발전연구원장

제2부 주제발표 15:20~16:20

- 제1주제 : ‘신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 강 성 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 제2주제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 김 철 원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제3부 종합토론 16:30~17:30

좌 장 양 창 식 탐라대학교 총장

토론자 고 경 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김 영 진 제주관광학회장

김 향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처장

김 희 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오 상 훈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 영 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 순)

목 차

- 제1주제 5
 - : **‘신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 강 성 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 제2주제 49
 -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 김 철 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 개 회 사 |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2회 제주미래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I’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 ‘Service-PROGRESS I’에는 서비스산업 수지 개선을 목표로 의료를 포함한 관
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산업 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
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특히 제주와 관련해선,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국제회의산업육성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소위 ‘관광 3법’ 이양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제주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Service-PROGRESS I’ 내용은 제주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인 면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대상, 금액 등을 다양하게 조정가능하고,
내국인 시내면세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경제자유
구역에도 제주지역과 같은 교육과 의료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제주의 서비스산업은
무한경쟁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보조를 맞추어 제주 관광산업발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강성진 고려대 교수님, 김철원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미래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제1주제

신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강 성 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 성 진

1. 서 론

□ 서비스 산업이란?

- 국민계정상 서비스 산업은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함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통신,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
 - Singlelmann 분류체계 (Schettkt and Yocarini, 2005 ; 김현정, 2007에서 인용)
 - (1)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 : 도소매, 운수보관
 - (2)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기계장비 임대,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
 - (3)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의료보건, 위생서비스, 사회복지
 - (4)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 음식숙박, 영화 및 연예, 기타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대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가사서비스

□ 한국경제의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와 고용없는 성장 지속 가능성

-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결과 한국경제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

가하는 탈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GDP 비중으로 보면 1990년 49.5%에서 2007년 57.6%로 증가하였고, 고용 비중으로 보아도 같은 기간 54.8%에서 66.7%로 증가하였음.
-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대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 차원에서의 산업화가 필요한 시점임

- 경제구조의 선진화로 한국경제는 서비스 분야의 산업화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의 흑자 기조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흑자를 이루어야 하는 경제구조임

2.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 서비스 산업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

-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이 되는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의 각종 정책이 제조업 기준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여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를 충족시켜 줄 만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해외로의 지출이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 국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성도 제조업을 100으로 할 때 1993년 108, 2000년 64.8, 그리고 2005년 51.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또한 국내소비자들의 해외이전의 정도를 보여주는 서비스수지 적자도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수지 적자가 74.2억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205.7억 달러가 적자였음.
- 이는 총액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큰 적자이며 GDP에 대한 비율로 보면 OECD 국가 중 최대라고 할 수 있음.

□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 필요

- 신성장 동력이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 한국의 경제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온 전통적 제조업은 국제적 비교우위를 상실해가고 있고, 첨단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미래형 첨단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첨단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취업유발계수 상으로 볼 때 2003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10억원 당 12.1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20.5명을 유발하여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있고 육성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함.

□ 민간 주도형 경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 경제구조상으로 이제는 과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단계에서 시행되었던 정부 주도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
- 정부의 기능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좋은 질의 재화를 공급하기에는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짐.

-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임.
- 그러기에 이번 정부는 경제발전단계에 적합하게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여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하고자 함.
- 창조적 실용주의에 의한 경제 정책

3. 현 정부의 경제철학

□ 시장과 정부는 서로의 역할에서 각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해야 좋은 일이 있고 시장을 앞세우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임.
- 단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우리 경제의 발전 상태에서는 민간부분의 국제경쟁력이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발전되어 있으므로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국가주도형 전략보다는 민간주도형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임.

□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하여 우리는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개선만이 아니라 빈곤완화라는 정책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함.

- 이들 세 목표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
-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시기보다 1980년대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고도 성장 시기에 오히려 소득분배상태가 더 좋았고 빈곤율도 더욱 낮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 경제성장을 통하여 절대빈곤이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의 경제발전과정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발전경험에서 입증되고 있고 여러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분배도 마찬가지임.

□ 세 개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함.

-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대한민국의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있으므로 과거처럼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은 지양하고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마음 놓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스스로 개혁하여 민간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부문에 대하여 아낌없는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경제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민간에서 진입이 어려운 미래형 최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시장이라는 경쟁의 틀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따뜻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함.

□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5가지 특징

- “민간주도 성장 잠재력 확충”
-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계의 일원”
- “창조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타협의 리더십”

□ 요약하면 정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시장기구 안에서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임.

-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장친화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국가기구 중심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달성한다는 것임.
- 반면에 국제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낙오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음.

- 이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임.

□ 결국 과거 정부들과 달리 민간중심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총공급을 증대시켜 주는데 현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 있음.

- 우리경제의 현 상태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현재 기업들의 보유한 현금여력이 충분하고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여력이 아직도 충분함으로 성장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과거 10여 년 동안의 정부와 다른 점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갈등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복지정책은 단지 소득분배의 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두어 빈곤난화정책을 동시에 강조하여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경제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철학임.

4.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

□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비전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8년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I)」에 이어 올해 중 2·3단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으로 있음.

- 이에 따르면 단기과제(2008년 6월 30일 완료) 17개, 중기과제(2008년 12월 31일 완료) 57개, 장기과제(2009년 이후) 19개 등 총 9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정부가 2008년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관광, 의료 관광, 유학 연수, 지식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대책은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3번에 걸친 서비스 산업 선진화대책에 이어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9월에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12월에는 3단계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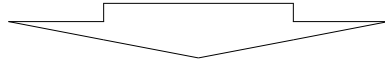
< PROGRESS- I (’08. 4월) : 서비스수지 개선 >

- **【관광·의료관광】** 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주도적 역할
 - 수요자·고객 입장에서 여행 전 과정을 세밀하게 개선
- **【교육】**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 전환
 - 외국교육기관 등 설립·운영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등
- **【지식기반서비스】**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창출
 -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금융 등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 < PROGRESS-Ⅱ ('08. 9월) :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 —

- 【진입규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
 - 교육·의료·법률 등 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를 혁신
- 【영업규제】 기업·소비자의 체감 만족도 제고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 < PROGRESS-Ⅲ ('08. 12월) :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 —

- 【고부가가치 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 디자인, 컨설팅, 컨벤션 및 연관산업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 인력】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제고
 - 높은 질적 수준의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 구축

□ 선진국경제로 진입할수록 경제의 서비스화(탈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동시에 고용창출을 결정짓는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각국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과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정책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음.

□ 「Service - PROGRESS I」에서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부문별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2008, 5)

4.1 관광 부문

- 먼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지역-민간이 주도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의체(주민-지자체-업계)를 통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발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광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괄 이양함.
 - 관광3법을 제주도로 이양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 및 사업자 등록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며, 휴양펜션업·관광숙박업 등의 자율성도 조례로도 가능해짐.
-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국내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에 전자안내판을 도입하고, 일본·중국어 병기, 외국어 표기법 오류 수정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2008년 12월)하며 부실 여행상품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 일정 변경 사전고지 의무 등 여행계약 제도 정비,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Self Regulatory Management) 체제 마련을 지원함.
- 환경·문화·전통과 연계하여 우리만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1) 2012년까지 ‘섬·크루즈·이순신·공룡·습지’의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 추진,
 - (2) DMZ 접경지역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팸투어를 실시(2008년 5월) 하고 7월부터 일반인·외국인 대상 관광을 시행,
 - (3) 외국 관광객 쇼핑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홍콩과 같은 ‘Korea Grand Sale(가칭)’을 실시하며,
 - (4) 역 기능을 상실한 구 서울 역사를 리모델링하여 공연·전시·이벤트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2010년)임.
-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서 적용하던 부가세 영세율을 음식용역까지로 확대(2009년 12월까지), 옥외 음식점 영업 허용, 외국인 고용 확대(국가 산단 소재 호텔 → 관광특구내 호텔) 등 관광호텔 규제 완화하고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 감면(50%)함.

- 특히 중요한 정책으로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해외골프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수요를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주로 조세관련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주요 내용

● 개별소비세 등(2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 : 전액 감면
● 종부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1~4% → 별도합산특례 0.8%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에 0.8% 단일세율 적용)
● 재산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개발지 및 건축물) : 분리과세 4% → 2%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 → 2%

□ 주요 국의 정책

○ 일 본

- 전통적으로 관광수지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수지 적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200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민관합동의 “Visit Japan Campaign”을 추진하였고 관광르네상스 등 기본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

- 최근 크루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환승여행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 2002년 발생한 SARS의 후유증으로 관광객이 감소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4년 이후 급격히 관광객이 증가하여 2004년 1,754만여 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였음.

○ 말레이시아

- 2010년까지 외국관광객 2,36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말레이시아 전통 마을 홈스테이 프로그램, 외국인 은퇴자를 위한 말레이시아 이민 프로그램 등의 추진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과 함께 “Malaysia Truly Asia”라는 관광브랜드로 해외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음.

4.2 의료 부문

□ 다른 서비스 산업과 더불어 공공성이라는 전제하에 가장 많은 규제 하에 있는 부문 중 하나임.

- 여기에 주요한 문제는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의료관광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논의라고 할 수 있음.

□ 2006년 2월에 의료산업선진위원회의 의제로 영리법인 도입방안에 대한 의제로 선정되었으나 그 후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어 도입이 되지 못했음.

- 의료관광 문제도 최근 태국의 경우처럼 각종 관광 상품과 연계된 각종 의료상품의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최근 논의를 하고 있음.

□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많은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민간 비영리기관은 물론이고 영리의료기관도 허용하고 있음.
- 영리법인 병원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정기택, 2008).
 -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분이 없는 의료법인’에 의한 병원설립이 이루어진 경우 지분소유자가 탈퇴하거나 법인 해산 시 지분 소유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영리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병원 개설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나 영리법인 자체는 허용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현재 비영리법인이 90%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또한 공공병원까지도 민간 및 해외자본과의 합작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단지 의료관광부문은 정부발표에 의하면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위한 제도 정비와 우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해외환자 대상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해외 환자와 동반 가족은 치료 완료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 개선하고,
- 둘째, 미국(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 고가상품), 일본·중국(성형, 치아미백 등 미용 관련)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제공하며,
- 셋째,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양·한방 협진 허용 등 국내 의료기관 규제 완화(의료법 전면개정안 조속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 범위, 부대사업범위(호텔업까지 가능) 등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의료관광산업

○ 태 국

-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국가임.
- 외국인환자 방문이 2005년 약 97만 명에서 2007년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의료관광이 발전한 원인으로는 저렴한 진료비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정책의 실시라고 할 수 있음.
- 태국의 경우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태국 방콕의 변화가 수쿰윗에 위치한 범룽랏 병원은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대 글로벌 병원 중 맨 처음으로 소개된 동남아 최대 규모의 병원이다. ... ‘의료 관광’이 강점인 병원답게 10만 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554실의 입원병동은 5성급 호텔과 맞먹을 정도다. 병원 구내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갖춘 74실의 별관숙소와 51실의 고급아파트형 숙소가 있다. 음식도 태국식은 물론 서양식, 일본식, 중국식, 이슬람식 등 다양하게 서비스한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공항에서부터 픽업 서비스를 받으며 가족들에게는 인근 호텔 숙박권까지 패키지로 준다.”(동아일보, 2007년 1월 14일)

○ 싱가포르

- 세계적인 의료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통해 2012년까지 100만 명의 의료 환자 유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말레이시아

- 2004년 의료기관의 광고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와 골프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홍보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환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4.3 유학 · 연수 부문 :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

□ 한국의 경우 서비스 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국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대책

-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치노력 강화(과실송금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 30%로 확대),
- (2) 외국인학교 규제 합리화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외국거주 5년→3년)하고 국내 학력을 인정하며,
- (3) 원어민 보조교사(자격요건 완화)를 확충하고,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교사제 (TEE : 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도입하여 영어 공교육 내실화하고,
- (4)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임.

□ 중 국

- 교육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독립학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독립학원은 국립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따라서 나머지 지분을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는 결국 높은 교육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높은 질의 서비스 공급으로 중국전역에 인기 있는 학교가 되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질 높은 외국학교를 중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

- 1997년부터 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WCU)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수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으

로 세계수준의 캠퍼스를 유치하고 또한 기존 대학은 해외유수의 대학과 연계하여 동동학위제 등을 통한 교육서비스 질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 두바이

-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음 : 풍부한 오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경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임.
- 자신들이 유치한 글로벌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백화점식 대학타운인 “Knowledge Village”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토지의 무상제공, 과실송금 허용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들 주요 국가들의 교육정책과 한국의 교육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 이들은 과실송금과 영리학교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각종 세금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들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여기에 우수한 국제학교들이 국내에 설립되어지지 않고 있고 동시에 국내 교육서비스 공급의 질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국내수요의 해외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주요국가 해외대학 유치 환경 비교

구분	두바이	싱가포르	중 국	한 국
과실 송금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영리 학교 법인 설립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세 금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없음
기 타 정 부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무상제공 ·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 유학생에게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무상제공 · 연구비 50% 지원 · 정부부처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 행정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무상제공 · 건설비용 제공 ·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 설립 허용 · 해외인재 유치 장려금 지급 (베이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홍보 및 학생 유치 지원 · 설립운영비 부분지원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간 대학, 호주 울릉공 대학 등 20개 대학 유치 ·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인 ('07년 1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탠퍼드, MIT, 존스홉킨스 등 35개 대학 유치 · USB,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해 아시아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탠퍼드대 등 100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 · 교류 ·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분교 (1개) 설립 추진

4.4 지식기반서비스 부문

□ 이 부문은 단순히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만의 독자적 성장에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타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는 중간재적 성격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그 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던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 확대하여 2012년까지 수출입은행 1.4조 원, 수출보험공사 0.8조 원을 금융 지원하고 2009년까지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 시범 운영함.
- 둘째,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쿠폰제 경영컨설팅 확대 등 아웃소싱 활성화 여건 조성으로 국내 수요기반 확충함.
- 셋째, 2009년 1월까지 지식기반서비스기업(합명·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를 적용하여 이중과세 조정으로 세부담을 완화함.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1)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실행까지의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의 신뢰성 회복

-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년 후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 세워진 계획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추진하느냐는 문제이고 진정으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실시되고 있느냐는 문제임.
-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3차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념논쟁으로 비화하고 동시에 각종 이해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실제로는 정책이 실행되지는 못하였음.

2) 현정부의 각종 서비스 산업 정책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에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왜냐하면 비록 실효는 거두지 못했지만 과거 정부들은 전략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 주었음
- 이는 혁신도시 정책처럼 다양한 지방산업 육성 정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정책이 되고 말았음.
- 이는 지방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투자하기만 하면 수요가 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방이 발전한다는 이념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

3) 수요자 중심의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

-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현정부는 철저히 수요 중심으로 정책이 실시되어질 것임.
- 다시 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비교 우위에 있고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임.
- 어느 특정지역이 독점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 비록 그런 정책적 혜택을 받더라도 단기적인 혜택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타 지방에 우위를 넘겨 줄 것임.
- 이에 제주는 이러한 고려를 참조하여 성장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임.

4) 공공성 개념의 허구성

-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 이해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용어 때문임.
- 이러한 사상이 사실 한국의 국내 서비스업 시장의 경쟁 도입 정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임.
- 특히 교육 및 의료 등의 산업의 경우 혜택을 받는 정도가 모든 수요자에게 절대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지나친 평등주의의 개념으로 공공성을

해석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음.

- 공공성이라고 하면 이처럼 모든 주체가 수요하는 서비스 질이 동등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최소한의 혜택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이전의 공공성 개념은 우리가 원하는 개념의 공공성이 아닌 왜곡된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임.

5) 교육, 의료 분야의 영리법인 도입과 투자 재원의 다양화가 허용되어야 함.

- 중요한 출발점이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교육, 의료, 관광 등의 경우를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은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허용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앞서서도 보았지만 주요 경쟁상대국들에 비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과실송금이나 영리법인을 위한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임.
- 부유층도 한국민이며 그들의 소유도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함.
- 서비스 부문의 산업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해외 수요를 국내로 이전하여 이들의 소득이 국내에 쓰여지도록 하여야 함.

6) 투자 유인의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필요

- 국내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직접적인 투자유인이 필요한데 한국정부의 정책은 국내투자자에게 보다는 국외투자자에 대한 일방

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책에서 보면 외국인 학교나 병원은 외국인만 설립이 가능하고 그들만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충분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인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 과연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임.
- 최근의 교육시장개방정책에서 송도에 국제학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외국투자자들에게 각종 혜택은 주어지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 노출
 - 물론 여기에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닌 아직 수요도 명확치 않은 지역에 대한 우선적 허가 정책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투자여력이 있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국제학교의 설립을 유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부족한 경영 노하우나 인력 보충은 충분히 외국업체들과의 제휴나 외주(outsourcing)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이익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이렇게 할 경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도 줄어들게 될 것임.

7) 교육 · 의료 · 휴양이 결합된 복합휴양지 산업 육성 필요

□ 관광이 아닌 휴양산업 육성 : 노령화 추이에 대한 대비

- 주변 주요지역으로부터의 단기간 이동이 쉬운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항공에 대한 의존이 높아 단기간 체류하는 관광보다는 장기체류형 복합휴양지가 바람직함.

- 홍콩, 싱가포르, 중국 유형이 아닌 호주나 멕시코(칸쿤, 아카폴코)의 선진 국형을 벤치마킹
 - 국내 5%의 부유한 노령인구의 수요 이전 정책
 - 예) 삼성의 수원 시설 비교
 - 한라산 지역에 케이블카 및 열차 등 주요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이 한라산 지역의 관광을 용이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임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복합적인 실내형 휴양시설이 필요함.
 - 테니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조깅장 등을 실내화하여 기후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 관광객을 실내로 흡수
- 복합휴양지형이어야지 테마파크식이어서는 안됨.
 - 장기체류형 휴양지로서 지내는 과정에서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이루어져야 함.
 - 단기방문형 테마파크의 경우 이용료가 상당히 비싼 형태로 제주도에는 적합하지 않음.
 -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테마파크 설립 붐이 일고 있는데 이는 수익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5개 정도가 구체적 설립예정 발표 : 영종도(MGM 스튜디오), 송도(파라마운트 스튜디오), 화성(유니버설 스튜디오), 포천(에코디장니 시티), 화성·안산(해양체험 테마파크)
 - 대체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간 방문객이 최소 700만 명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매일경제, 2007. 12. 14).

○ 호주의 경제특구

- 일반적으로 호주 정부에 의해 복합관광휴양지(integrated tourism resorts)로 지정된 지역 중 1999년 9월 이전에 지정되었으면 거주 지역(residential property)의 외국인취득(foreign acquisition)은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제한으로부터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 지정된 지역은 개발된 거주 지역(developed residential property)에만 이러한 면제가 적용됨.
- 예) 골드 코스트 지역의 경제특구(Royal Pines Resorts) 등

○ 싱가포르경제와 카지노 건설

- 싱가포르 정부는 침체되는 국내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위락시설을 갖춘 카지노리조트를 건설 중
- 2004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12.3%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하락하여 2005년 1분기에는 2.4%에 그침.
- 싱가포르 정부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복합휴양지를 the Marina Bay와 Sentosa에 설립하려 함.
- Casino는 각 지역(floor)의 5%내에서만 이루어짐.
- 2009년과 2010년에는 마리나베이에 ‘샌즈 카지노’와 말레이시에 켄팅 그룹의 ‘센토사 카지노’가 문을 열 계획임.

(i) The Marina Bay Sands

- 투자 : 36억 USD, 2006. 4. 6~2009. 1. 1
- 주로 convention and hospitality facilities
- convention : 120만 square feet(108,000m²),
retail outlets : 100만 square feet(9만m²)

(ii) 센토사(Sentosa)

- 가족적 휴양지(47ha)
- 급증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은 최근 문을 연 ‘시티 비보(city il vivo)’ 같은 초대형 쇼핑몰 개설과 더불어 인공섬인 센토사 재개발로 모아지고 있음.
- 특히 센토사는 지금까지도 싱가포르를 찾는 이들이 누구나 찾는 관광지였으나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지에다 신주거지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음.

<참고문헌>

강성진, 2008, “신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에 대한 일반론적 정책 제언,” 제주발전포럼, 통권 제 26호, p.2-10.

강성진, 2007. 12, “제주지역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효율성 제고 방안”,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특별 강연.

기획재정부, 2008,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육성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기획재정부, 2008,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정기택, 2008, 의료분야 규제완화 : 영리법인, mimeo.

신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목 차

1. 서 론
2.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현 정부의 경제철학
4.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1. 서론

서비스 산업이란?

- 국민계정상 서비스 산업은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함
- Singlelmann 분류체계 (Schettkt and Yocarini, 2005; 김현정, 2007에서 인용)
 - (1)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 도소매, 운수보관
 - (2)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기계장비 임대,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
 - (3)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의료보건, 위생서비스, 사회복지
 - (4)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음식숙박, 영화 및 연예, 기타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대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가사서비스

1. 서론

한국경제의 탈산업화와 고용없는 성장 지속 가능성

-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탈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
- 서비스 산업 비중 증대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서비스 산업의 시장경제 차원에서의 산업화 필요

- 경제구조의 선진화로 한국경제는 서비스 분야의 산업화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
-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의 흑자 기조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흑자를 이루어야 하는 경제구조

2.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정책이 필요

- 현재의 국내의 각종 정책이 제조업 기준으로 되어 있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국내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
- 서비스수지: 2003년 기준 74.2억 달러, 2007년 205.7억 달러 적자
- 총액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큰 적자, GDP에 대한 비율로 보면 OECD국가 중 최대

2.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 필요

- 신성장동력이면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첨단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취업유발계수 상으로 볼 때 2003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10억원 당 12.1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20.5명을 유발

민간 주도형 경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정부의 기능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좋은 질의 재화를 공급하기에는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짐
- 이번 정부는 경제발전단계에 적합하게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여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하고자 함

3. 현 정부의 경제철학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음

- 현재 우리 경제의 발전 상태에서는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이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과거 개발도상국시절의 국가주도형 전략보다 민간주도형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더욱 바람직

경제성장, 소득분배 개선, 빈곤완화 동시에 달성해야 함

- 세 목표는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님
-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시기 보다 1980년대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고도성장시기에 오히려 소득분배상태가 더 좋았고 빈곤율도 더욱 낮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 경제성장을 통한 절대빈곤이 감소는 우리의 경제발전과정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발전경험에서 입증되고 있고 여러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분배도 마찬가지임

3. 현 정부의 경제철학

세 정책목표의 동시달성 위해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중요

- 정부주도 개발정책 지양, 공무원과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민간수준의 경쟁력을 유지, 또한 민간부문에 대하여 아낌없는 도움 지원
- 시장경제 문제점 극복: 민간에서 진입이 어려운 미래형 최첨단산업에 지속적, 전폭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필요, 시장이라는 경쟁의 틀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따뜻하고 전폭적인 지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5가지 특징

- “민간주도 성장잠재력 확충”
-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계의 일원”
- “창조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타협의 리더십”

3. 현 정부의 경제철학

시장 경쟁력이 있는 경제주체는 시장기구안에서 최대한 보호

- 시장친화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국가기구 중심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달성
- 국제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과거 10여 년 동안의 정부와 다른 점(현 정부의 경제철학)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갈등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
- 복지정책은 단지 소득분배의 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두어 빈곤난화정책을 동시에 강조
-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경제정책을 실시

4.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비전

-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제시
- 2008년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에 이어 올해 중 2, 3단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예정
- 단기과제(2008년 6월 30일 완료) 17개, 중기과제(2008년 12월 31일 완료) 57개, 장기과제(2009년 이후) 19개 등 총 93개 과제 추진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비전

- 2008년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관광, 의료 관광, 유학 연수, 지식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포함

4.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

PROGRESS- I ('08.4월) : 서비스수지 개선

- **【관광.의료관광】** 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주도적 역할
 - 수요자.고객 입장에서 여행 전 과정을 세밀하게 개선
- **【교육】**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 전환
 - 외국교육기관 등 설립.운영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등
- **【지식기반서비스】**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창출
 -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금융 등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4.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

PROGRESS- II ('08.9월) :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 **【진입규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
 - 교육.의료.법률 등 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를 혁신
- **【영업규제】** 기업, 소비자의 체감 만족도 제고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PROGRESS- III ('08.12월) :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 디자인, 컨설팅, 컨벤션 및 연관산업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 인력】**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제고
 - 높은 질적 수준의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 구축

4.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

4.1. 관광부문

4.2. 의료부문

4.3. 유학.연수 부문 :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

4.4.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

4.1. 관광부문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방안 마련

- ▶ 지역 여건에 맞추어 지역-민간이 주도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을 위해 지역별 관광협의체(주민-지자체-업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
- ▶ 제주도의 자율적 관광발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광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괄 이양
- ▶ 관광프로세스 개선: 주요 관광지에 전자안내판을 도입, 일본, 중국어 병기, 외국어 표기법 오류 수정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2008년 12월), 여행일정 변경 사전고지 의무 등 여행계약 제도 정비,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제 마련 지원

4.1. 관광부문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방안 마련

- 2012년까지 '섬.크루즈.이순신.공룡.습지'의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 추진
- DMZ 접경지역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팸투어를 실시(2008년 5월)하고 7월부터 일반인.외국인 대상 관광을 시행
- 외국 관광객 쇼핑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홍콩과 같은 'Korea Grand Sale(가칭)'을 실시
- 역 기능을 상실한 구 서울 역사를 리모델링 하여 공연.전시.이벤트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2010년)

4.1. 관광부문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방안 마련

-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적극 추진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서 적용하던 부가세 영세율을 음식용역까지로 확대(2009년 12월까지), 옥외 음식점 영업 허용, 외국인 고용 확대 등 관광호텔 규제 완화하고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 감면(50%)
-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하는 정책 실시: 조세관련 부담 완화
 - 개별소비세 등(2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 : 전액감면
 - 종부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1~4% → 별도합산특례 0.8%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에 0.8% 단일세율 적용)
 - 재산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개발지 및 건축물) : 분리과세 4% → 2%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 → 2%

4.2. 의료부문

공공성이라는 전제하에 가장 많은 규제 하에 있는 부문

- 주요 문제: 영리법인 허용문제, 의료관광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논의
- 2006년 2월에 의료산업선진위원회의 의제로 영리법인 도입방안에 대한 의제로 선전되었으나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어 도입되지 못함
- 태국의 경우처럼 각종 관광 상품과 연계된 각종 의료상품의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최근 논의 중

영리법인 허용문제

-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많은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민간 비영리기관은 물론이고 영리의료기도 허용
- 영리법인 병원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

4.2. 의료부문

의료관광부문의 정부발표

-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위한 제도 정비와 우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제시
 - 해외환자 대상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해외 환자와 동반 가족은 치료 완료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 개선
 - 미국(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 고가상품), 일본·중국(성형, 치아미백 등 미용관련)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제공하며,
 -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양·한방 협진 허용 등 국내 의료기관 규제 완화(의료법 전면개정안 조속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 범위, 부대사업 범위(호텔업까지 가능) 등을 대폭 확대

4.2. 의료부문

주요국의 의료관광산업

- 태국: 가장 활발한 국가
 - 외국인환자 방문이 2005년 약 97만명에서 2007년 150만명으로 증가
 -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발전 요인: 저렴한 진료비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투자촉진정책의 실시
- 싱가포르
 - 세계적인 의료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통해 2012년까지 100만명의 의료 환자 유치계획
- 말레이시아
 - 2004년 의료기관의 광고행위 금지규정 폐지, 의료와 골프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 의료관광 홍보 박람회를 개최 등 해외환자 유치 적극적 추진

4.3. 유학.연수 부문

한국

- 서비스 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국내수요에 비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문

주요 대책

- 2008년 12월 31일 까지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 대폭 완화 유치노력 강화(과실송금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 30%로 확대),
- 외국인학교 규제 합리화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외국거주 5년→3년)하고 국내 학력 인정
- 원어민 보조교사(자격요건 완화)를 확충하고,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교사제 (TEE : 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도입하여 영어 공교육 내실화
-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

4.3. 유학.연수 부문

중국

- 교육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독립학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독립학원은 국립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따라서 나머지 지분을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높은 질의 서비스 공급으로 중국전역에 인기 있는 학교가 되어 급속도로 확산

싱가포르

- 1997년부터 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WCU)를 설립하여 운영: 세계수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계수준의 캠퍼스를 유치하고 또한 기존 대학은 해외유수의 대학과 연계하여 동등학위제 등을 통한 교육서비스 질의 강화를 시도

4.3. 유학.연수 부문

두바이

- 풍부한 오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
- 자신들이 유치한 글로벌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백화점식 대학타운인 "Knowledge Village"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대학 분교를 유치

주요국과 한국의 교육정책 주요 차이점

- 과실송금과 영리학교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각종 세금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들이 사용되지 않음
- 우수한 국제학교들이 한국 내에 설립되지 않고 있고 동시에 국내 교육서비스 공급의 질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국내수요의 해외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4.3. 유학.연수 부문

<주요국가 해외대학 유치 환경비교>

	과실 송금	영리 학교 법인 설립	세 금
두바이	가능	가능	세금면제
싱가포르	가능	가능	세금면제
중국	가능	가능	세금면제
한국	불가	불가	세금면제 없음

4.3. 유학.연수 부문

<주요국가 해외대학 유치 환경비교>

	기 타 정 부 지 원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무상제공 .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 유학생에게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제도 운영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무상제공 . 연구비 50%지원 . 정부부처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 행정 편의 제공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무상제공 . 건설비용 제공 .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 해외인재 유치 장려금 지급 (베이징시)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홍보 및 학생 유치 지원 . 설립운영비 부분지원

4.3. 유학.연수 부문

<주요국가 해외대학 유치 환경비교>

	성 과
두바이	. 미시간 대학, 호주 울릉공 대학 등 20개 대학 유치 .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인('07년 1만명)
싱가포르	. 스탠퍼드, MIT, 존스홉킨스 등 35개 대학 유치 . USB, 도이체뱅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해 아시아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김
중국	. 스탠퍼드대 등 100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 교류 .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한국	.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분교 (1개) 설립 추진

4.4.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

중간재적 성격의 중요한 산업

- 이 부문은 단순히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만의 독자적 성장에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타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는 중간재적 성격의 중요한 산업

분야별 지원 방안

- 수출지원: 2012년까지 수출입은행 1.4조원, 수출보험공사 0.8조원을 금융 지원하고 2009년까지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 시범 운영
- 아웃소싱 활성화 여건 조성: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쿠폰제 경영컨설팅 확대 등
- 세 부담 완화: 2009년 1월까지 지식기반서비스기업(합명.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제도 적용하여 이중과세 조정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실행까지 정책의 신뢰성 회복

-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여 5년 후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의 육성을 계획
- 목표 달성 위한 중요 전제조건 : 현실적으로 추진문제, 진정으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실시문제

지방 자치단체에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실효는 거두지 못했지만 과거 정부들은 전략 산업을 지정하여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음
 - 예산만 낭비하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정책이 됨
 - 지방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지정을 통한 투자가 수요를 그 지역으로 이동시켜 지방이 발전한다는 이념적 접근임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수요자 중심의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

- 과거경험을 교훈으로 현정부는 철저히 수요중심 정책을 실시할 것임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비교 우위에 있고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임
- 특정지역이 독점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못할 것임

공공성 개념의 허구성

-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 : 공공성이라는 용어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의 다양성을 부정
- 공공성이 모든 주체가 수요하는 서비스 질이 동등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최소한의 혜택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교육, 의료 분야의 영리법인 도입

-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교육, 의료, 관광 등의 경우를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은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허용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경쟁상대국들에 비해 가장 중요한 차이점 : 한국의 경우 과실송금이나 영리법인에 위한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부유층도 한 국민이며 그들의 소유도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함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필요

- 국내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직접적 투자유인 필요
- 부족한 경영 노하우나 인력보충은 충분히 외국 업체들과의 제휴나 외주(outsourcing)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이익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음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교육 · 의료 · 휴양이 결합된 복합휴양지 산업 육성 필요

- 관광이 아닌 휴양산업 육성 : 노령화 추이에 대한 대비
 - 항공의존이 높아 단기 체류 관광보다 장기체류형 복합휴양지가 바람직
- 홍콩, 싱가포르, 중국 유형이 아닌 호주나 멕시코(칸쿤, 아카폴코)의 선진국형을 벤치마킹
 - 국내 5%의 부유한 노령인구의 수요 이전 정책
 - 한라산 지역에 케이블카 및 열차 등 주요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우 등이 한라산 지역의 관광을 용이하게 유도할 필요
- 큰 약점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예측의 어려움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복합적인 실내형 휴양시설이 필요
- 복합휴양지형이어야지 테마파크식이어서는 안됨
 - 장기체류형 휴양지로 지내는 과정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이루어져야 함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호주의 경제특구

- 1999년 9월 이전에 호주 정부에 의해 복합관광휴양지로 지정되었으면 거주 지역의 외국인취득은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제한으로부터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 지정된 지역은 개발된 거주 지역에만 이러한 면제가 적용됨
- 예) 골드 코스트 지역의 경제특구(Royal Pines Resorts)



5. 국내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싱가포르 경제와 카지노 건설

- 싱가포르 정부는 침체되는 국내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위락시설을 갖춘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 중
- 2004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12.3%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하락하여 2005년 1분기에는 2.4%에 그침
- 싱가포르 정부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복합휴양지를 the Marina Bay와 Sentosa에 설립하려 함
- Casino는 각 지역(floor)의 5%내에서만 이루어짐.
- 2009년과 2010년에는 마리나베이에 '샌즈 카지노'와 말레이시에 켄팅그룹의 '센토사 카지노'가 문을 열 계획

신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T H A N K
Y O U

제2주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김 철 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김 철 원

I. 들어가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8일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산업의 선진화 전략’이 보고되었고, 지난 4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전략으로 ‘Service Progress I’이 발표되었고, 9월에 ‘Service Progress II’, 그리고 12월 ‘Service Progress III’를 발표할 예정이다. Progress의 의미는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를 만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로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P(Productivity)는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고자 함이며, R(Regulatory Reform)은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O(Openness)는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해외 선진 우수 기법을 도입하여 국내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G(Global Standard)는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R(Rivalry)는 외부적 충격에 약한 허약한 구조를 개선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체질 강화이며, E(Environmental Improvement)는 제조업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또한 S(Specialization)는 전문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마지막 S(Scale Economy)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서비스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서비스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는 시급성은 관광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관광 2,000만명 시대를 맞이했으나 인아웃바운드가 불균형적인 비율(약 1:2.2)로 발전하면서 방한 외래객 입국은 3~5%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 해외여행은 15% 수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가 101억불에 달해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0.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대비 독일로 1.48%, 영국 1.19%, 러시아 1.07%의 뒤를 잇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8억달러, 이 중 관광수지 적자는 101억달러로 지난 2001년 1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적자폭이 6년 만에 6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관광객 및 관광수지>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수입(백만\$)	지출(백만\$)	수지(백만\$)
2004	5,818천명	8,826천명	6,053	9,856	△3,803
2005	6,023	10,080	5,793	12,025	△6,232
2006	6,155	11,610	5,760	14,336	△8,576
2007	6,448(4.8%)	13,325(14.8%)	5,750(-0.2%)	15,880(10.8%)	△10,129(18.1%)

출처 :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보고자료('08.3.28)

특히 국내관광 경쟁력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국내 관광경쟁력을 130개국 가운데 31위로 평가했고, 29위인 인적-문화-자연 자원보다 정책 및 규제가 38위, 사업 환경과 인프라가 34위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세계관광시장의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볼 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원인을 규명하자면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내관광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특히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하는 제주관광의 부진과 관광수용태세의 미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관광의 매력성 상실, 접근성의

어려움(항공좌석), 고비용과 불친절의 이미지는 한국관광 발전의 부정적 요인이다.

다행히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제주관광의 고비용·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선진화 전략’에서 제시된 관광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서비스 선진화 전략과 관련한 관광부문을 살펴보고 이를 제주관광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¹⁾

1. 기본 추진방향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나타난 관광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종전 정부주도의 관광진흥체계를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광산업(호텔업, 여행업, 관광단지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세지원의 혜택이 최종 관광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 및 관리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를 창출하여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 관광부문의 선진화 방안

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어렵게 하는 관광수지 적자는 서비스산

1)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에서도 관광산업의 고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들이 많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컨벤션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MICE 산업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and Exhibition)을 의미하며 Meetings는 국내외 모든 회의를 포함하여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국내회의까지 회의산업으로 정하는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고, incentive travel은 기업회의에서 파생된 보상관광을 의미하는 고수익 고효율의 부문이며, 컨벤션과 인센티브가 통합된 concentive (convention and incentive)의 형태이다. convention은 기존의 의미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전시를 수반한 국제회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exhibition은 무역전시를 포함하고 잠재적으로 회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전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확대 해석하면 메가 이벤트, 박람회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여행을 활성화하여 MICE 산업은 고수익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의료관광의 활성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05년 12월 한국관광공사, 무역협회 공동으로 의료관광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민·관 공동의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여기에는 34개 의료기관이 회원(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은 특별회원)이 활동 중에 있고, 2007년 7월에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해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한국의료 다국어 홈페이지(www.koreahealthtour.co.kr)를 구축하고 미국, 일본 및 중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유치 활성화’,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제도 간소화’, ‘비자 신청 첨부서류 최소화(병원영업허가서 등 6개 → 의사소견서 등 3개) 등 관련 절차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 완화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 규제 대폭 완화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을 허용하고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신명·열정·풍류 등 한국 정신문화 관광자원화 지원이다. 템플스테이 유력인사 초청 등 관광상품 홍보 강화하고 세계 태권도 종주국을 활용한 체험 및 시범기회상품 확대하는 등 한국의 전통 콘텐츠·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를 통한 상품의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한국적 특성이 강한 관광상품 명품화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경계구역인 DMZ의 특수성과 환경·생태를 활용한 관광상품 활성화하고, 슬로시티, 장수벨트, 습지 등 생태·체험관광자원 확충,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프로젝트 추진, ‘고궁 음악회’ 상설공연 추진하는 등 테마파크, 크루즈,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규분야 발굴의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다섯째,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선진화를 위하여 ‘한국방문 캠페인 2010~2012’의 추진이다. 현재 60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외래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행사로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12년 중국, 일본 관광객 각 300만명 유치’를 위하여 중국관광객 대상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방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한류 붐 쇠퇴 등에 따라 2004년 이후 오히려 감소 추세인 방한 일본관광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수용태세 선진화 방안에는 ‘증거가 숙박시설의 확충지원’을 위하여 관광공사 및 지자체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지정호텔제도’ 도입(관광진흥법 개정 사항) 및 관광기금을 지원하고 한국 고유의 증거가 숙박 브랜드(BENIKEA) 육성 및 노후화 상업용 건물을 활용한 신규 증거가 호텔의 확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래관광객 대상 음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중국인관광객 전문 지정식당(현재 176개)에 대한 인센티브와 퇴출시스템의 동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밖에 전국에 산재된 관광안내소, 안내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구축하고 보급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의 정비 및 표준화 및 IT기술을 응용한 관광안내서비스의 첨단화를 위하여 ‘외래관광객과 동행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 전문인력 통합지원센터 구축하여 현장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관광전공자 대상 인턴십 제도 도입을 추진을 위하여 ‘관광고용정보 DB 구축’이 있고, 국내관광 캠페인 강화,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 개발을 통해 국민의 국내관광 활성화하고 여수 엑스포 계기 남해안

지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 관광지역으로 관광레저와 정주시설을 겸비한 관광레저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차원에서 ‘가족·체류·종합휴양’ 개념의 대규모 관광자원 확충을 정책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3. 제주관광관련 선진화 방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지역주민, 사업자, 지자체의 상생적 공생(symbiosis)의 여건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경쟁력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관광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다. 주민·사업자·지자체 등이 지역공동협의체(LTB : Local Tourism Board)를 구성('08.12.31일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협의체 구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하여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지자체 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캠페인(예, “가고픈 마을 만들기 운동”, “우리 고장 손님을 미소로 맞이하기”, “내고향 역사 바로 알리기” 등)을 전개하며 지자체는 관광객 친화적 환경 조성,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사업자는 관광상품을 창의적으로 마케팅하고 경영혁신 및 품질 관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공동협의체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우수한 협의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지자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의체가 수립한 관광육성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발·홍보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개정안 국회 제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내에 관광 3법을 적용 배제하고, 규제와 권한의 일괄 이양(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하며, 사회적 규제, 소비자보호규정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고,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할 예정이다. 또한 법으로 되어 있는 휴양펜션업, 관광사업자단체 설립, 관광숙박업 등급 관리, 관광종사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이관하여 자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지자체의 관광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 등에 능통한 외국인을 지자체 관광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현재 연구·기술·교육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지방공무원법 개정).

한편, 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07.11월, 삭제하기로 입안 예고되었던 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근거 조항을 존속 (관세청 고시)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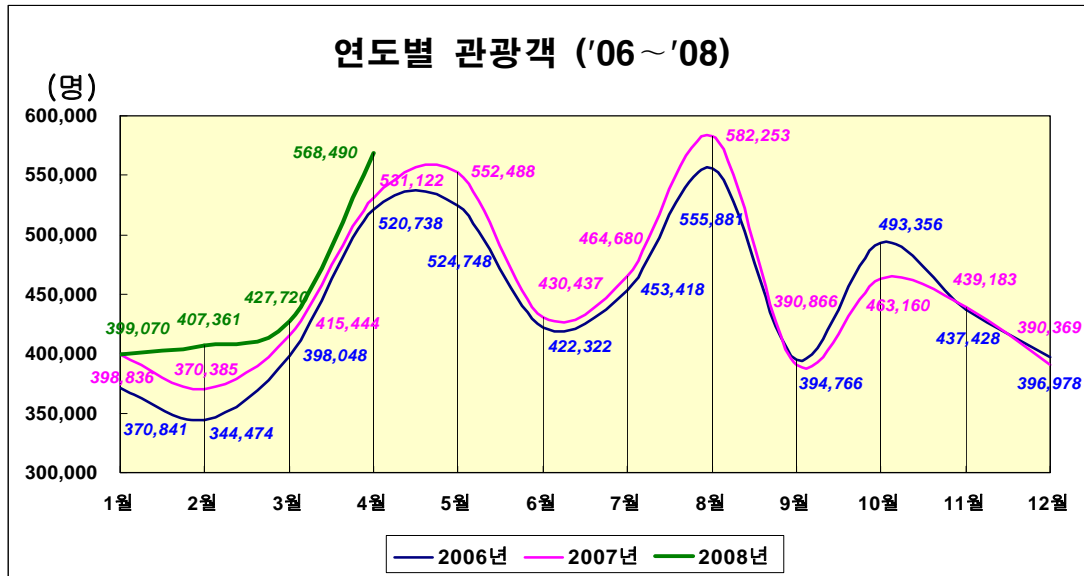
상기와 같은 관광부문의 선진화 전략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권한 등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III. 제주관광의 현황과 대응 전략

1. 제주관광의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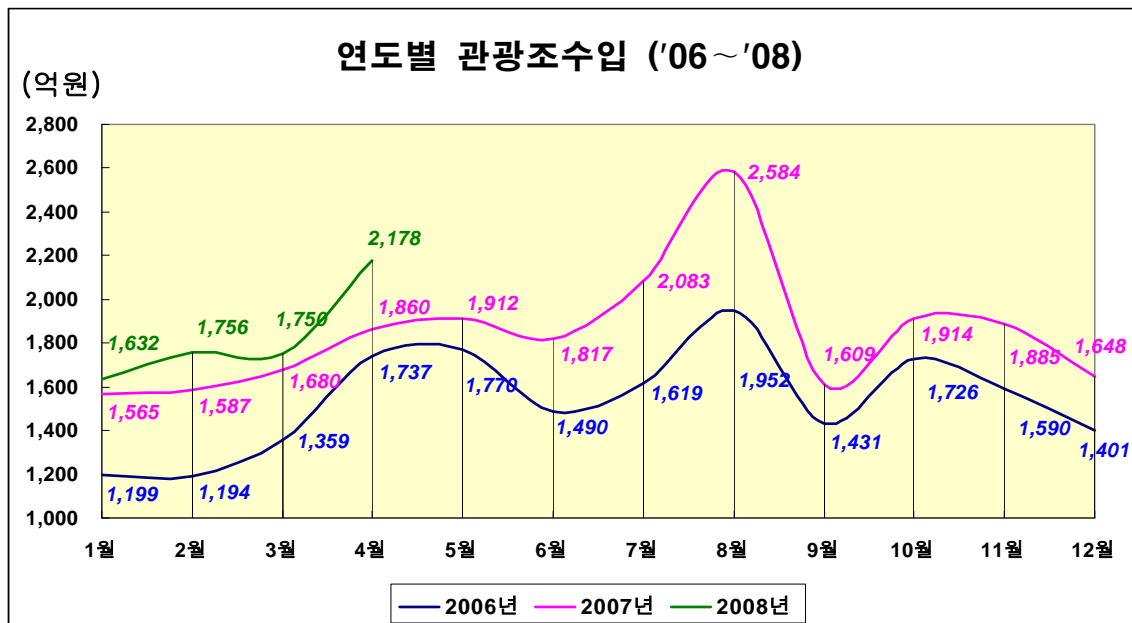
국내권 동향을 살펴보면, 고유가·환율 상승으로 해외여행비용 증가, 국내 항공 좌석수 증가, 수학여행단의 제주방문 증가 등으로 4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5월 현재까지는 당초 성장 목표 6.8%를 넘어서 7%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항공좌석 확보 문제, 고비용·불친절 문제 해소 등 수용태세 확립에 나서는 도 당국의 의지가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신뢰하는 관광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해외권 관광동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타킷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항공좌석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항공사측에서는 탑승률의 불규칙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35%의 높은 성장을 해오다 5월중에 국내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30%대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2) 본 내용은 지난 5월 14일 제주도청에서 개최된 “신경제혁명을 위한 5월중 관광산업 진흥 전략 보고회”의 내용을 참조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08. 5)

관광조수입은 4월까지 7,31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하였으며 금
년도 25,000억원(전년대비 12.9%)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08. 5)

제주관광의 문제점이 주로 비싸고 불편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관광지로 낙인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제기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3일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를 통하여 고비용 실태를 공개한 이후 3개월여 동안 가격 내리기 운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1단계 목표 954개 업체에서 381업체(40%)가 동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자정노력의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관광 이미지를 심어주어 관광객이 전년 대비 6%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동참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에 의하면 현재 음식점을 중심으로 인하 업체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급관광호텔 100%, 해수욕장 90% 참여, 골프장도 50% 이상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관광업계·행정·도민이 서로 협심하여 고비용·불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TV·언론·LED 홍보 등을 통해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2008년 관광객 580만명, 관광조수입 25,000억원 목표 달성과 함께 제주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제주관광에 더할 나위없는 기회이고 제주관광 성장의 변곡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 사항이다.

2.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가. MICE 산업 육성 지원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통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MICE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범 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구성된 ‘MICE 유치 지원단’ 활동과 연계하여 제주에서 개최되는 행사유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도 차원의 관계기관 및 업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국제회의, 인센티브 등 유치 소요 파악하고 로비, 홍보 등 최적의 유치방안 도출 및 활동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컨벤션센터에 MICE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관광협회, 컨벤션뷰로 등 사이에 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의 통합 및 재편할 필요가 있다³⁾.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은 MICE와 관광부문의 통합마케팅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창출 및 지방 컨벤션산업의 육성 및 컨벤션업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CE 업계의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MICE 자격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에 MICE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혹은 국제적 단위의 ‘MICE Ambassador’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유치 지원 및 홍보 활동의 수단으로 국내외 인사들을 대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두사람의 Ambassador가 아닌 ‘50만명 Ambassador’제도의 시행이다.

나. 의료관광의 육성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할 계획(’07년 1.6만명 → ’08년 3만명 → ’12년 10만명)이다. 곧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활성화 마스터 플랜&액션 플랜”을 관련 부처와 기관이 공동 발표할 예정(08.8월)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 환자 및 동반자 출입국 편의를 위한 비자발급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인도의 경우에는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Medical Visa를 시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3) 최근에 설립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효율성과 전문 노하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ICC에 MICE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공사가 안정적 조직 운영을 할 경우, MICE 전담조직의 이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해외 의료관광객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주관광공사의 출범은 제주도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을 허용하고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휴양, 의료, 그리고 관광은 제주의 자연자원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의료관련 국제행사 개최도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 크루즈 관광

현재 크루즈 관광은 첫 기항지에서 입출국 절차를 마치고 두 번째 기항지 이후 인원만 확인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한번 입국심사를 받으면 국내 추가적인 입국심사를 필요치 않게 하는 제도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유람선업과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관광크루즈업”을 추가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적극 활용하여 크루즈 관광의 거점지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시설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는 물론 마케팅 관점에서 상품을 만들고 크루즈 관광에서 감동을 연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페리호를 크루즈라는 개념으로 전환시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크루즈 선으로 목적지 이동은 물론 관광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페리호의 개조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제주도 항공좌석이 부족하다는 불평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수학여행단이나 단체여행객들이 인천에서, 부산에서, 목포 등에서 페리호를 크루즈라는 개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탁월성 (operational excellence)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

였듯이 지자체간의 연계상품 개발을 페리호의 크루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크루즈는 국제운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페리호를 크루즈화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상품의 주도성(product leadership)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산, 호남권, 인천광역시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라. 한류 상품 개발

한류를 활용한 관광은 한류스타의 팬미팅, 각종 콘서트, 영화제와 같은 축제 등 다양하게 개발·상품화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상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드라마 촬영현장 투어, 영화제 및 시상식 참관상품 개발, 생방송 가요프로그램 참관 등 한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도가 ‘대장금’ 이후로는 한류와 관련한 드라마 개발 등에 참여가 미비하고 가시적 성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한류상품의 근원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한류관광 추진위원회”를 전국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류방송영상페스티벌’을 제안해 본다(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나, 매우 매력적이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마. ‘Korea Sparkling’ 브랜드 마케팅 사업

주지하다시피, 국가 브랜드는 ‘Dynamic Korea’이고, 관광관련 브랜드는 “Korea Sparkling”이다. 제주도도 잘 떠오르지 않지만 관광관련 브랜드가 있다. 필자가 5년 전에 외국 브랜드 전문회사와 함께 “Jeju, Beautiful Escape” 슬로건을 개발한 적이 있는 데 채택되지는 않은 것 같다. 현재 정부는 한국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관광브랜드 홍보 확산을 위해서 세계 주요 매체에 관광브랜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구분하여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 관광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통합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며, 또한 2012년까지 주요 경쟁국 수준의 관광 이미지 홍보예산 확충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요 경쟁국 수준의 예산 확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국가 관광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브랜드 마케팅은 효과가 매우 높지만,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함께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관광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Korea, Sparkling’ 슬로건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브랜드를 ‘Korea Sparkling’의 하위브랜드로 개발하여 브랜드 마케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Korea Sparkling’ 브랜드 마케팅은 현재 특징없고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한 現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새롭게 형상화시키고자 한다. 단기적·한시적 관광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통합적·전략적 관광마케팅 기반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친숙도 부족으로 한국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외래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바. 교육관광의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유학연수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룩하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의 걸림돌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에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을 적극 지원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철폐(’08.12.31일까지)하고 유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관광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IV. 마 무 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과거 한국관광 1번지의 명성을 찾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관광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벌이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제주관광의 더할 나위없는 기회이고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사업들을 제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한 정책적 현명함과 함께 도민 전체가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주인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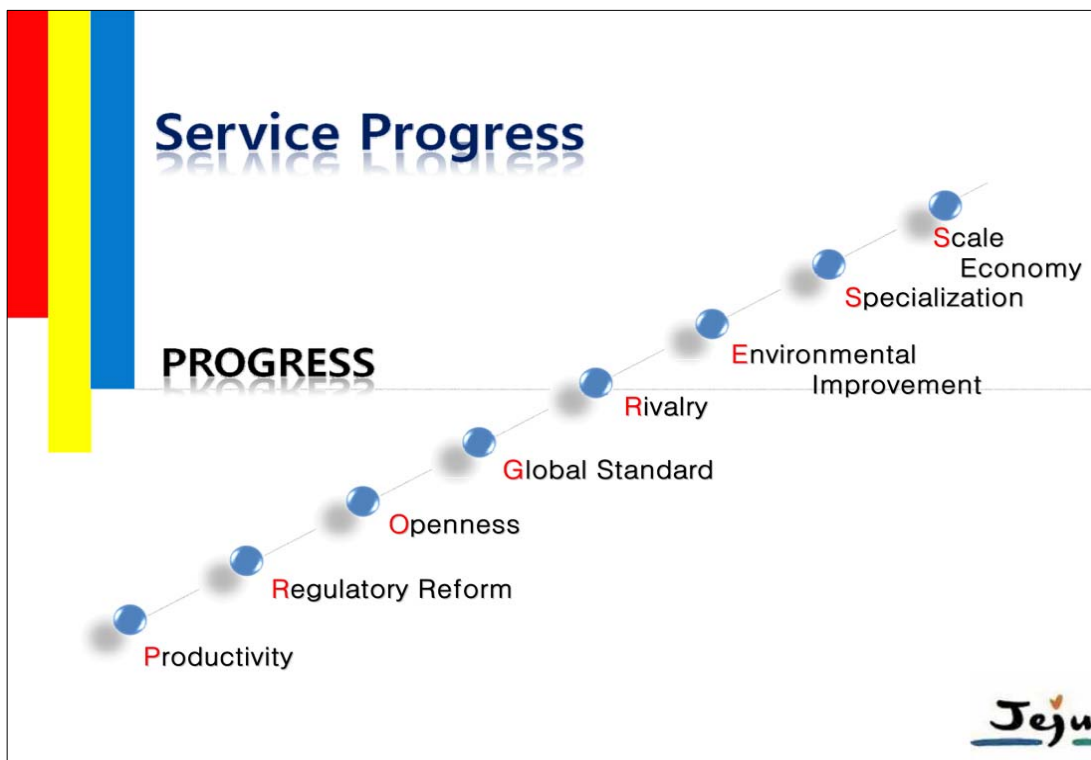
지난 6월에 개최된 제주 관광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제주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시사적이다. “제주에 올 때 ‘설렘’이나 ‘감동’이 없다”, “기내에서 중국인들이 탑승한 경우 중국어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고 기내에 제주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항공사와 협력해야 한다”, “제주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점보시푸드’처럼 유명 핫집타운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신문에 난 해외여행 광고를 보면 동남아와 중국 상품이 30만~40만원대”라며 “소비자 시각에서 제주도 관광산업 현실을 제대로 보고 고품질 관광상품으로 경쟁해야 한다”, “제주에는 연간 날씨가 쾌청한 날이 60여 일에 불과하다”면서 “골프도 좋지만 날씨와 상관없는 실내 놀이공원, 문화행사 등을 활성화하고 한라산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케이블카를 놓는 것도 좋다”, “고유가와 원화값 하락으로 해외여행 인파가 주춤해진 이때가 제주도에는 기회”라며 “가격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적극 홍보해 해외로 떠나려던 내국인을 제주도로 끌어와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다. 경청할 부분들이 많다.

사실 제주관광의 현실을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고, 한 두가지 방안으로 제주관광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인 접근과 함께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격내리기 운동이나 불친절 해소’ 운동이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주도가 고품질의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평가되어 제값을 받으면서 방문가치가 높은 관광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¹⁾

1) 조선일보 8.11일자에 나온 기사는 매우 시사적임. “오분자기뎌배기, 갈치조림, 전복죽 등 제주를 대표하는 유명 음식점들의 가격은 여전히 비쌌고,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뻗뻗한 자세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불친절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이미 높아진 한국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만한 시설 및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여전히 아쉬웠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 만들었다는 리조트를 어렵게 예약하고 갔지만 야자수 풍경을 제외하면 경기, 강원 일대의 리조트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다. 소형 야외 풀을 제외하면 즐길만한 시설도 거의 없었다. 리조트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기도 바쁜 인도네시아 발리와 필리핀 세부의 3급 리조트보다 못했다. 물론 이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도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준 높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제주도 휴가 트렌드도 일시적 현상에 머물지 모른다. 현재 기울이고 있는 변화 노력에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중장기 대책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광수지 적자 규모(GDP대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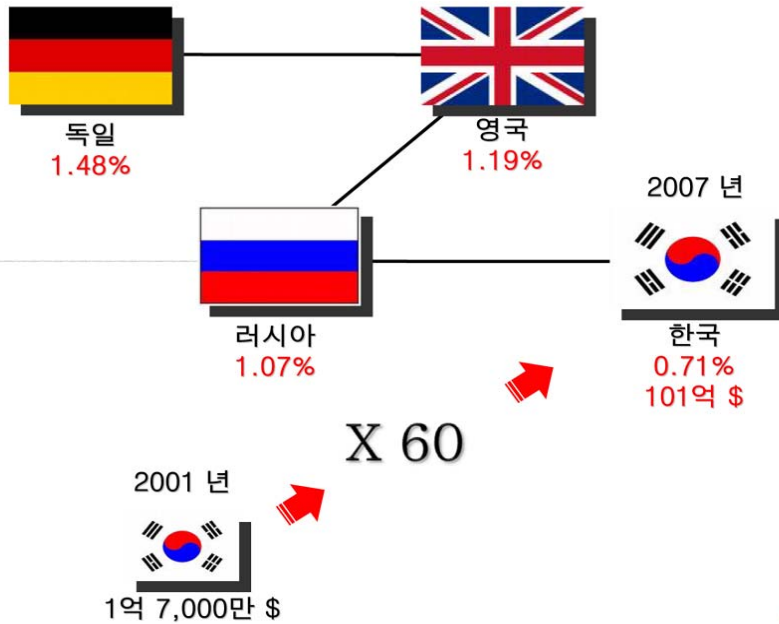


Table 1: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Country/Economy
Switzerland
Austria
Germany
Australia
Spai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anada
Sweden
France
Iceland
Finland

Table 2: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Regulatory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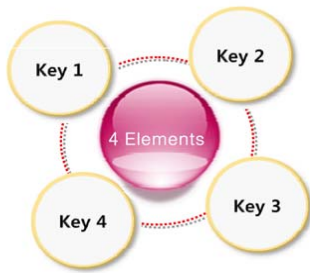
Country/Economy
Albania
Algeri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Table 3: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Busines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Country/Economy	TAT BUSINES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4.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5. Ground transport infrastructure		6. Tourism infrastructure		7. ICT infrastructure		8. Price competitiveness in T&T industry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Estonia	16	5.04	13	4.96	2	6.57	67	3.22	9	5.49	40	4.97
Hong Kong SAR	41	4.18	65	2.98	32	4.81	27	4.89	25	3.82	79	4.43
Hungary	9	5.21	16	4.85	25	4.68	7	6.71	1	5.93	119	3.86
India	59	3.70	25	4.00	29	4.51	80	2.78	97	1.98	20	5.23
Indonesia	85	3.16	61	3.07	80	2.87	109	1.87	94	2.04	1	5.96
Ireland	20	4.90	24	4.54	85	4.05	5	6.78	27	4.47	99	4.24
Israel	36	4.29	47	3.52	31	4.86	36	4.51	22	4.75	91	4.22
Italy	24	4.77	26	4.43	40	4.51	4	6.88	25	4.57	124	3.49
Jamaica	48	3.87	53	3.28	28	4.53	55	3.81	45	3.88	85	4.38
Japan	21	4.89	21	4.61	9	6.22	46	4.19	16	4.86	94	4.28
Jordan	60	3.64	60	3.08	65	3.74	56	3.77	65	2.63	27	4.99
Kazakhstan	96	2.94	85	2.83	81	3.04	100	2.19	77	2.40	80	4.42
Kenya	102	2.82	73	2.83	107	2.73	98	2.27	108	1.80	75	4.50
Korea Rep.	34	4.52	28	3.82	15	5.17	70	3.23	6	5.72	106	4.15
Kuwait	53	3.82	59	3.13	48	4.36	57	3.77	53	3.05	51	4.81
Kyrgyz Republic	129	2.27	119	2.08	121	2.43	129	1.06	112	1.67	70	4.62
Latvia	43	4.17	56	3.22	41	4.50	33	4.77	36	3.72	67	4.65
Lesotho	125	2.46	129	1.88	127	2.23	113	1.74	120	1.52	94	5.03
Libya	115	2.68	103	2.37	130	2.25	110	1.84	91	2.09	57	4.77
Lithuania	45	4.00	82	2.86	27	4.97	58	3.72	33	4.06	73	4.58

- ▶ 국내관광의 경쟁력 취약
- ▶ 한국관광의 1번지; 제주관광의 부진과 관광수용 태세의 미비

Advanced scheme for Servic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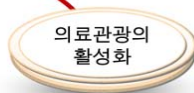


- ▶ 정부 주도 → 민관 파트너십 체제로의 전환
- ▶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
- ▶ 지속적인 규제 개혁
- ▶ 고수익 구조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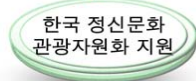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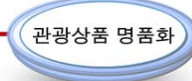
- Meetings
- Incentives
- Conventions & Exhibition



- 의료서비스 수준 해외홍보 활동
- 제도개선



- 템플스테이, 태권도
- 전통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통한 상품개발 강화



- DMZ
- 고부가가치 신규분야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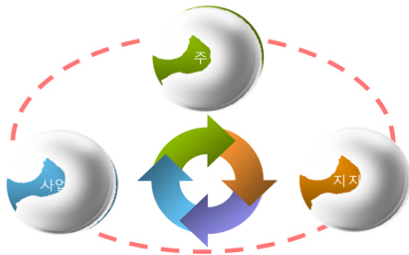


- 비자제도 개선
- 신규 중저가 호텔 확충 지원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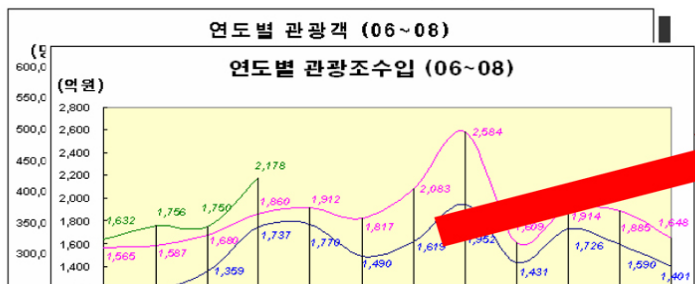


제주관광 선진화 방안



- ▶ Local Tourism Board(LTB)
- ▶ 지역 관광의 경쟁력 제고
- ▶ 관광잠재력 극대화 캠페인
- ▶ 인센티브를 통한 주민,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유도
- ▶ 개발, 홍보비용의 지원
- ▶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

제주관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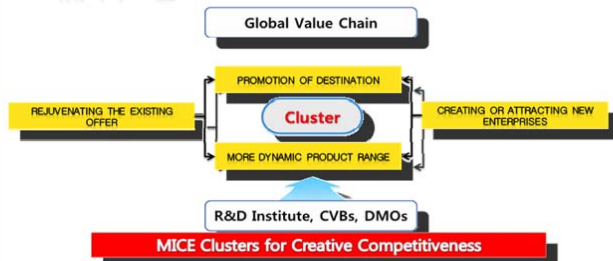


580만

25,000억원

제주관광의 목표달성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전략 제시

M.I.C.E



- ▶ MICE유치지원 강화
- ▶ MICE유치전담 조직 개편
- ▶ MICE 자격증 제도 도입
- ▶ '50만명 Ambassador'

전략

의료관광의 육성

- ▶ 의료관광의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교육
- ▶ 휴양, 의료, 관광의 자원과 인프라

Cruise

- ▶ '관광 크루즈업', 관광진흥법 개정
- ▶ 크루즈 관광 마케팅차원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의 필요성 (Operational excellence, Product leadership)



Jeju

Hallyu, the Korean Wave



제주특별자치도 한류관광 추진위원회, 한류방송영상페스티벌

전략

'Dynamic Korea', 'Korea Sparkling'.....?



- ▶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 ▶ 통합적, 전략적 관광마케팅
- ▶ 외래관광객의 유치기반 마련

Jeju

Education Tourism

-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설립
- ▶ 골프아카데미 등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제 철폐

Education Tourism

Hallyu, The Korean wave

Brand slogan

Jeju

1

도민전체가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주인정신이 필요

2

'고려을 정훈을' 관광부조의 합력

3

종합적인 접근과 함께 체계적으로 실현방안의 수립

Jeju